

정보통신 윤리문제와 연구동향분석

공회경¹⁾ 김태성²⁾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요약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고도의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보통신사회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 윤리의 정의를 살펴보고, 정보통신사회와 윤리의 관계를 통하여 컴퓨터기술발달에 따른 정보사회의 윤리적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인터넷 도래 이후 정보통신 윤리 확립을 위한 사회적 대응 방안과 함께 바람직한 정보통신사회를 위한 변화된 정보윤리강령의 특징과 체계화된 윤리강령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제시한다.

1. 서론

인터넷의 보급과 정보통신기술의 진전은 산업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간의 전반적 생활양식과 행동양식마저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정보기술혁명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며 정보통신의 발달로 정보의 양과 전달 속도가 대량화, 신속화됨에 따라 생활패턴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을 이해함에 있어 어느 분야보다도 성장규모가 크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경제적 가치로 평가하며 국가사회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분야로 인식하고 있다. 이처럼 정보화 사회로 진전됨에 따라 정보화 사회에 대한 인식이 사회전반에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정보화 사회가 가져다 줄 생활의 편리함과 풍요로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역기능도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오용은 정보화 사회의 대표적인 역기능으로 컴퓨터

범죄 증가와 불건전 정보의 유통, 소프트웨어 절도, 바이러스 생성, 해킹, 사생활 침해 등과 같은 새로운 분야의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이 문제들은 정보통신 기술 전문가들이나 사용자들에게 윤리적 혼선을 생성시키고 개인의 개성과 윤리감을 상실하여 비인간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윤리관을 모색하고 정보통신 윤리를 확립하는 일은 우리가 당면한 시급한 시대적 과제이다. 바람직한 정보화 사회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기술뿐만 아니라 기술의 사용에 의해 필연적으로 파급되는 여러 가지의 사회현상과 환경변화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용 컴퓨터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통신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게 되어 더욱더 정보통신 윤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보통신 윤리의 궁극적인 과제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사회적인 규범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있다. 윤리적인 판단기준의 설정과 개인이나 사회에 대하여 어느 정도 수준의 정보윤리를 요구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2장에서 정보통신 윤리의 의미를 정의하고, 3장에서는 정보통신기

1) 충북대학교 경영정보전공 박사과정

2) 충북대학교 경영정보 조교수

술 발달에 따른 정보사회의 윤리적 문제들을 분석하고, 4장에서 정보통신 윤리강령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제시하며, 5장에서 이상의 논의들을 토대로 향후 바람직한 정보통신체계의 확립을 위한 정보통신 윤리문제에 대한 연구의 결론을 맺는다.

II. 정보통신 윤리의 개념

윤리란 행위의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 또는 도덕적인 것과 비도덕적인 것에 관한 판단기준의 체계 혹은 이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을 말한다. 또한 윤리는 그 적용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가정윤리, 사회윤리, 직업윤리, 기업윤리, 정보윤리 등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 정보통신 윤리란 윤리의 문제를 정보통신 또는 정보화 사회의 관점에서 조명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정보를 다루는데 있어 개인이나 사회구성원들의 행동이나 규범체계로서 그들의 행동이나 태도의 옳고 그름, 좋고 나쁨, 그리고 윤리적인 것과 비윤리적인 것을 판단하게 해주는 기준체계라 할 수 있다.

Moor는 정보윤리의 중점을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여 해결할 것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정책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밝혀주는 것이라 주장하였는데 이 정책은 개인적, 사회적 정책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컴퓨터 사용환경의 적절한 정책에 대한 부재는 정보화 사회가 시작되고 컴퓨터가 사용된 초기 시절부터 논의 되어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법률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새로운 정보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법이나 정책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김성연, 1996].

정보통신 윤리는 사회성을 띠고 있으므로 그 내용이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정보통신 윤리는 정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동태적인 것이며 또한 모든 사

람들에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원칙들의 집합이라고 보기도 힘들다. 특히 우리의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진입한 시점에서 정보통신 윤리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며 정립되어야 할 부분이 매우 있다고 하겠다.

정보통신 윤리의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사회적인 규범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있다. 윤리적 판단기준의 설정과 개인이나 사회에 어느 정도 수준을 정보통신 윤리를 준수하도록 요구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기업의 경우 윤리적인 관점에서 어떤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며 어떤 정보가 보호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와 개인의 경우 개인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조직이나 국가의 이익과, 정보를 노출당하는 개인의 이해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다.

지식중심의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창조적 개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인간관이 설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정신적, 문화적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윤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윤리 문제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에 맞추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윤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정보통신 윤리강령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다.

III. 정보사회의 윤리적인 문제

이 장에서는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과 정보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야기되는 윤리적 문제점들을 살펴본다.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 다각도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제일 중요하고 긴급한 것 중의 하나는 정보통신 윤리

를 확립하는 일이다.

다음의 <표-1>은 정보통신위원회 시정 요구 현황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자료이다.

문제 등의 세 종류로 분류하였다. 개인이 당면하고 있는 윤리적 딜레마는 많은 경우 사회적, 정치적 논의가 필요하다. 개인과 사회적인 조직, 정치적인 조직으로 이루어져는

위반내용	심의 건수	시정요구				
		계	내용삭제	경고	이용 정지	이용 해지
저작권 침해	6,581	6,290	819	254	4,137	1,080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112	18	15	2	0	1
사행심 조장/피라미드	139	34	1	0	32	1
유언비어	30	28	28	0	0	0
반국가	0	0	0	0	0	0
부당광고	1	0	0	0	0	0
음란/폭력 문자	1,299	943	602	232	20	89
음란/폭력 음성	1	0	0	0	0	0
음란/폭력물 판매	633	462	16	50	145	251
음란/폭력물 구매	65	59	11	48	0	0
음란/폭력물 교환	621	594	14	577	3	0
불건전 만남 유도	1,387	1,098	94	230	637	137
불건전 대화	3,503	3,154	6	3,101	46	1
음란물 소개 안내	301	102	27	50	21	4
언어 폭력	420	264	42	219	2	1
매춘	0	0	0	0	0	0
음란 정지영상	5,698	5,051	3,352	250	27	1,422
폭력 정지영상	134	117	80	11	0	26
음란 동영상	1,928	1,761	1,109	62	1	589
폭력 동영상	27	23	8	7	0	8
음란 게임	372	318	127	134	0	57
폭력 게임	5	0	0	0	0	0
기타/분류외	1,935	1,186	734	96	9	347
비심의 대상	18	0	0	0	0	0
계	25,210	21,502	7,085	5,323	5,080	4,014

<표-1>정보통신 윤리위원회 정보심의 통계 시정요구 현황정보

정보화 사회의 대표적인 역기능으로는 문화적 종속현상,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격차 발생, 정보의 홍수, 문화지체현상, 컴퓨터 관련 범죄의 증가, 불건전 정보의 유통, 정보기기 사용자의 건강, 인간소외 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Laudon은 정보화 사회의 윤리적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전체 상황에서 서로 견제하여 일시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개인은 조직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잘 알고 있으며, 여러 조직의 발달된 행동양식에 관한 법률 규범을 바탕으로 행동하게 된다[Forester, 1994].

대체로 정보통신망에서 벌어지는 비윤리적 행위들은 클라크가 제시한 네 가지 범주 중 사회적 침해와 경제적 침해행위 유형

에 속하고 있다. 사회에서 빚어지는 다양한 역기능적 인간 행동 등을 클라크는 네 가지 범주로 나누고 그 구체적 유형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이윤희, 1998].

- 우발적 역기능 : 정보 과부하, 소문 및 우발적 오보, 부주의한 명예훼손, 지위야 할 목록의 보존, 가벼운 표절, 정보의 부적절한 관리, 제한된 영역으로의 무단침입.

- 사회적 침해의 역기능 : 고의적인 오보, 기만, 고의적인 명예훼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대화를 지속하는 등의 희롱, 편지폭격, 외설음란물, 선동, 비인격화, 감시.

- 경제적 침해의 역기능 : 무단 광고성 전자우편(spam), 광고 판촉 및 강권, 정보 가공을 위한 정보의 2차적 사용, 과도한 표절, 지적 재산권 침해, 해킹, 바이러스, 시스템 안전 침해.

- 도피적 역기능 : 세금포탈이나 급지서적복사 등의 우회화, 익명화, 익명화, 기호화된 메시지의 해독 열쇠를 제한적으로 공급하는 등의 엄폐 등.

정보통신기반의 다양한 역기능적 인간 행동 유형들은 우발적이건 혹은 고의적이건간에 대부분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이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그 부정적 영향도 점차 사회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IV. 정보통신 윤리강령의 중요성

3장에서 살펴본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사회적 대응방안으로는 법적 대응방안, 기술적 대응방안, 교육적 대응방안, 시민운동차원의 대응방안, 그리고 끝으로 윤리강령에 의한 자율적인 규제방안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이윤희, 1998]. 첫째, 법적 대응방안은 국가의 공권력을 활용해 비윤리적 범죄 행위에 즉각적인 제재와 규제를 가함으로써 단기간

에 신속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이다. 둘째로, 기술적 대응방안은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기술적 측면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로서, 가령 인터넷 정보등급제라든지 불건전한 유해정보를 사전에 차단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교육적 대응방안은 법적, 제도적, 기술적 대응방안들보다 훨씬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며, 따라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은 대단히 크다고 하겠다. 교육적 대응방안은 올바른 윤리규범을 내면화하여 자율적으로 정보윤리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자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긴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 수립과 전문교사 양성 등 지속적인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정보윤리의 평생교육체계를 정비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정보통신 윤리 확립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시민 운동적 대응방안은 민간차원에서 자생적 정화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윤리의식을 고취시키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을 이용하는 집단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이다. 사회 보편적 차원에서의 정보통신 윤리 목표와 규범 및 기준이 확립된 다음에 비로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순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적, 제도적 통제에 의존하기보다 자율적 규제가 좀 더 활성화 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율적 규제의 대표적 지표가 윤리강령이라 할 수 있다.

정보통신 윤리의 궁극적인 과제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사회적인 규범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있다. 윤리적 판단기준의 설정과 개인이나 사회에 대하여 어느 정도 수준의 정보윤리를 요구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정보사회에서 야기되고 있는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체계로서, 단순히 정보통신기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정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옳음과 그름, 윤리적인 것과

비윤리적인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여 행위 하는데 필요한 규범적인 기준체계가 필요하다.

1995년에 설립된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에서는 일반적인 영역의 윤리강령으로 정보통신 윤리강령과 네티즌 윤리강령을 선포하고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정신과 행동 강령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윤리강령과 세계적으로 회원을 갖고 있는 전산기관협회(ACM)의 윤리강령을 비교하면, 한국의 윤리강령은 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의무와 역할에 대한 조항이 상대적으로 단순하며 구체적이지 않다. ACM의 윤리강령은 기본적인 원칙들을 일반적인 도덕적 의무, 전문가로서의 구체적 역할, 조직관리자의 의무 및 윤리강령의 준수 등 네 가지 범주로 나누고 각 조항에 대한 행동 지침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도덕적 의무와 같은 사회 도덕적 측면도 함께 언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사업자 윤리실천 강령은 사업자 영역의 윤리강령으로, 민간 정보영역을 구성하는 핵심집단으로서 정보통신사업자 영역의 윤리 확립을 중요한 관건으로 여기고 있다.

V. 결 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윤리와 정보통신 윤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과 정보사회의 문제점과 사회적 대응방안 및 정보통신 윤리강령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2002년 1월 29일 미국의 컴퓨터 보안 업체인 립택이 발표한 '인터넷 보안 위협 보고서'에 따르면 25개국의 300여 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의 인터넷 해킹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국의 해커들이 시도한 해킹이 전체 발생건수 가운데 9%를 차지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해커들의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정보화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과 윤리적 문제점들이 함께 발생하는 예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

다. 따라서 정보사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체계를 수립하지 못하고 단지 정보사회에 관한 유토피아적 전망에 취해서 기술 결정론적으로만 대처한다면, 정보의 범람으로 인한 문화적 혼란과 효율성을 앞세운 심한 가치관 상실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진정한 문화창조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정보윤리의 확립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1] 이윤희(1998), "정보통신윤리의 확립방안,"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통권3호.
- [2] <http://www.icec.or.kr>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3] 강홍렬·윤준수·황경식(1997), <고도정보사회의 정보윤리 확립을 위한 정책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4] 권기현(1998), "인간중심의 정보사회를 위한 일고찰,"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제2호.
- [5] 김성언(1996), "정보윤리의식의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연구논문집>, 제53집, pp.591~609.
- [6]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편(1995), <정보사회와 사회윤리>.
- [7] 이윤희(1998), "정보사회와 사적 영역의 위기," <담론21>봄호, 한국사회역사학회.
- [8]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편(1995), <정보사회와 정보통신윤리>.
- [9] 존슨, 데보라(1997), 추병완 외 역, <컴퓨터윤리학>, 한울아카데미.
- [10] Bowyer, Kevin, "Ethics and Computing," online manuscript. <http://www.computer.org/cspress/catalog/bp07130/chapt.html>.
- [11] Forester(1994), T. and Morrison, P. Computer Ethics: Cautionary Tales and Ethical Dilemmas in Computing, The MIT Press, Cambridge, MA.
- [12] 한국일보, 2002년 1월 29일자